

2011. 10. 25.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KDI 홍보팀

TEL 02) 958-4030 FAX 02) 960-0652 E-mail press@kdi.re.kr

KDI 개원 40주년 기념 국제회의 민주화와 세계화 시대 한국경제의 성과와 과제

Conference in Commemoration of KDI's 40th Anniversary
The Korean Economy in the Age of Democratization and Globalization:
Accomplishments and Challenges

- 기간: 2011년 10월 24(월) ~ 25(화)
- 장소: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하모니 볼룸(B1)
- 주최: KDI(한국개발연구원)

세션별 주요 논의 사항 요약

세션5. 사회복지제도의 발전

[발표: 안중범 성균관대학교 교수]

- 안중범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배리 보즈워스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과 공동 연구한 '한국의 소득 불균형: 트렌드, 그 원인과 해답의 분석' 논문을 통해 소득 불균형에 대한 분석에 기반한 정책대안을 제시

□ 한국은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이루어왔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, 소득 불균형 심화, 실업률 및 빈곤률 상승 등 부작용을 경험

○ 2008년 BBC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성장의 분배가 불평등한 국가 1위를 기록하는 등 소득 불균형 문제가 심각함이 드러남.

□ 본 연구에서는 1)성장과 분배의 균형에 발생한 구조적 균열, 2)이 같은 현상의 발생 원인, 3)성장과 분배에 미친 정부 및 각종 제도의 역할에 관해 논의

□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소득 불균형 동향

○ 1988~97년 사이 한국 GNI 가계 비중이 68%에서 '01~06년 사이 60%로 하락

○ 시민들이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보다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급속히 상승함으로써 큰 구매력 손실을 가져옴.

○ '00~06년 사이 1인당 실질 가처분 소득이 1인당 GDP의 1/3 수준으로 급락함.

□ 미시경제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소득 불균형 동향

○ 한국의 소득 불평등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, 소득 수준 상위의 자영업자 및 소득 수준 하위의 실직 및 은퇴 가구를 배제함으로써 소득 불균형을 저평가 하고 있음.

○ 심화하는 가계 임금 불균형은 임금 불균형과 상관관계가 있음.

○ 교육 수준에 따른 임금 격차는 1985년부터 90년대 중반까지는 크지 않았으나 이후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.

□ 소득 불평등과 빈곤의 사회경제적 요소들

○ 연구 결과에 따르면, 소득 수준의 변화가 소득 불평등의 심화와 큰 연관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한국 사례에 있어 쿠즈넛 가설(Kuznets Hypothesis)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.

- 비즈니스 사이클과 연관이 있는 소득 불평등은 특히 저소득층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.
- 경제 위기 이후 소득 이동성이 더욱 둔화된 상황에서 소득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
- 노령화, 교육, 세계화 등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
 - 미세린기를 사용해 교육과 노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초기에는 교육 성취가 소득 평등화 효과를 불러오지만(숙련 노동력의 지속적 공급으로 임금 격차를 줄임) 현재 그 효과가 둔화되고 있으며, 향후 고령화가 더욱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
 - 세계화가 임금 격차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,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됨.

□ 공공분야의 역할

- 사회복지제도의 역할
 - 한국의 사회복지제도 도입 역사를 살펴보면 단기간 내에 여러 제도가 빠르게 도입됨에 따라 특히 6대 사회복지 제도를 포함한 복지 예산이 빠르게 증가한 경향이 있음.
 - 1995~2005년 사이 한국의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GDP 비율의 2배로 늘어났으나 여전히 OECD 평균의 1/3 수준에 불과함.
 - 한국 사회복지제도는 1)특히 국민보험 및 고용보험의 경우 적용 범위가 굉장히 좁고, 2)인구 고령화를 감안하면 더 많은 복지 예산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.
 - 국민 연금을 살펴보면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에 따라 노령의존비율이 대단히 가파르게 상승하고, 연금 의존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출산율이 매우 저조한 상태로 지속된다면 연금 의존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.

- 65세 이상 가장(家長) 가구의 36%가 빈곤에 있고, 전체 가구의 빈곤률이 10.5% 임을 감안할 때, 노인 빈곤률 심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.
- 현재 전체 근로자의 77%만이 가입한 고용보험과 관련해 비가입자인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큰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됨.
- 전 국민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한국의 건강보험과 관련해 공공부문의 미약한 지원과 높은 개인 부담률은 문제
- 건강보험도 자영업자나 비정규노동자 배제, 가족 수의 비 고려, 적은 수의 보험 적용 항목, 높은 본인부담률 등은 시급한 해결이 요구됨.
-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도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실제 복지예산에서 매우 적은 비중만을 차지하고 있으며, 실제 제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

○ 조세제도의 역할

- 한국에서 세금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매우 미약한 원인은 1)세금 면제의 기회가 너무 많고, 2)탈세를 부추기는 제도 등

○ 재분배 정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, 대상에 대한 효과성 강화, 둘째, 조세 행정 및 복지 전달 체계 개혁, 셋째, 예산 부문의 구조 조정과 개혁 등이 이루어져야 함.

- 대상에 대한 효과성(Target Efficiency) 강화
: 보험 가입자 수를 늘리고 특히 빈곤 가정에 대한 안전망 기능을 마련하는 등 복지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, 동시에 다양한 복지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야기된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야 할 필요
- 조세 행정 및 복지 전달 체계의 개혁
: 조세 행정은 소득 및 자산 상태 조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바탕해야 하며, 복지 전달 체계의 효율화 또한 강화할 필요

- 예산 부문의 구조 조정 및 개혁

: 복지 예산은 비교적 건전하게 운영되어 왔으나 향후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며, 증가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

[토론: 랜달 존스, OECD 경제국 선임이코노미스트]

- OECD 국가 중 복지 지출이 낮은 한국의 노동력은 소득 불평등 심화,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, 특히 빈곤층이 노인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정책 방향을 살펴야 할 것임.
- 여전히 성숙되지 못한 한국의 국민연금제도가 빈곤을 감소에 기여하지 못했음을 감안해 정부는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적 안정성을 꾀하는 한편 퇴직 연령을 높여야 하며, 의료보험제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지출 비율을 올리고 혜택 범위를 확대 적용해야 할 것임.
- 소득 불균형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성의 노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 기업은 가족 친화적이고 여성을 배려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고졸 출신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독려해야 함.
-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통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회 안전망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복지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한편, 민간부문과의 공조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함.

[토론: 윤희숙 KDI 연구위원]

-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도 소득분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원인은 소득분배와 관련해 1990년대 초반부터 존재했던 구조적 문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됨.
- 한국의 사회복지제도 도입의 역사가 길지 않으므로 복지제도의 특성을 분석하고 결론 내리기에는 다소 성급한 것으로 판단되며, 현재 복지 관련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함.

- 급속한 고령화는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수로, 이에 따라 나타나는 노인빈곤을 심화하는 문제
 - 한국의 노인빈곤율과 관련해 부모를 부양하는 자식의 경제력 등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고려해야 함.
- 경제개발의 빠른 속도는 한국의 독특한 사회경제적 요소로서, 특히 공업화, 세계 경제속의 편입, 탈공업화가 동시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함.
- 취업자들의 이직 지원 및 직업 훈련 제공 등을 통해 경제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사람들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임.